

16개 은행 2.2조원 새 평가모형, 거절 사유를 물을 수 있나

SCB 시범운영과 자동화평가 설명·재산출 요구는 같은 절차가 아니다

금융위원회의 7월 27일 발표, 8월 13일 감독규정 개정과 현행 신용정보법·시행령을 대조해 SCB의 적용범위와 개인사업자의 설명·정정 권리를 구분했습니다.

발행	2026.08.22	연번	2026_51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새 모형의 핵심을 대출 문턱의 일괄 완화가 아니라 평가에 쓰이는 정보의 확장으로 본다. 매출·업종·상권 데이터가 얇은 금융이력을 보완할 수 있지만 결과를 설명하는 창구가 열리지 않으면 오류도 넓게 복제된다. 시범운영의 성패는 승인액보다 사용 사실·주요 기준·정정과 재산출 절차가 신청 화면에 함께 놓이는지에 달려 있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이 8월 말부터 16개 은행의 2.2조원 규모 개인사업자대출에 순차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은 자동화평가 사용 여부와 주요 기준을 묻고 잘못된 기초정보의 정정·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27일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의 시범운영 일정을 발표했고, 8월 13일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참여	16개 은행	7개 은행 우선, 9개 은행 하반기
대상 규모	2조 2천억원	개인사업자대출 시범운영
첫 적용	2026년 8월 말	은행별 순차 시행
분석정보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 포함 AI 분석
후속 적용	2026년 10월 · 2027년	개인사업자 사잇돌 · 지역신보 보증
규정 개정	2026년 8월 13일	SCB 등급을 신용정보로 반영

SCB는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기존 신용정보와 함께 분석해 소상공인의 성장성과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모형입니다. 새 모형을 쓴다고 모든 신청자의 한도나 금리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정보법 제36조의2는 개인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 자동화평가 사용 여부, 결과, 주요 기준과 기초정보 개요의 설명을 요구하고 부정확한 정보의 정정·삭제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시행령은 금융거래 계약의 제안·승낙 여부 결정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서면·전자우편·웹·앱 등의 요청·회신 방법을 정합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전통적 개인사업자 심사는 대표자의 개인신용과 담보·매출자료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SCB는 카드매출, 업종과 상권 같은 사업 흐름을 더해 짧은 금융이력의 빈칸을 메우려는 구조입니다.

정보가 늘면 평가의 구별력도 높아질 수 있지만 입력 오류·업종 분류와 상권 충격이 여러 은행의 공통 모형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같은 데이터가 여러 금융회사에서 쓰일수록 정정 한 번의 파급효과도 커집니다.

‘자동화평가 설명요구’와 ‘대출 거절 근거 통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자동화 사용 여부와 결과·기준·기초정보를 묻는 절차이고, 후자는 거절에 사용된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설명을 받는다고 승인이나 조건 변경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8월 13일 감독규정 개정으로 SCB 등급의 제도상 취급은 구체화됐지만, 은행별 신청 화면과 상담창구가 같은 형식으로 공개되는지는 시범운영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16개 은행의 시범상품을 신청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2조원은 대상 상품의 전체 규모이지 신청자에게 새로 공급되는 순증액이나 승인 보장액이 아닙니다.

거절 또는 조건 악화가 생기면 어느 데이터가 틀렸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동화 사용 여부와 주요 기준을 먼저 묻고, 매출·업종·상권 등 기초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면 자료를 붙여 정정·재산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은행별 접수창구

첫 적용 은행의 상품화면에서 설명·정정·재산출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아직 동일 형식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2 · 사람의 개입 범위

SCB 점수 뒤에 사람이 심사하는 항목과 자동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은행별로 어떻게 다른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3 · 오류 정정의 전파

한 은행에서 바로잡은 매출·업종 정보가 공동 모형과 다른 참여은행에 언제 반영되는지 공통 절차가 필요합니다.

04 · 효과의 측정

승인률·금리 변화와 연체율을 기존 모형과 같은 차주군으로 비교한 시행결과와는 아직 없습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 대출 신청·거절 화면을 저장하고 SCB 또는 자동화평가가 사용됐는지, 결과와 주요 기준·기초정보 개요를 서면이나 앱으로 요구합니다. - 매출·업종·상권·대표자 신용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증빙을 붙여 정정·삭제와 재산출을 함께 요청합니다. - 설명요구와 민원은 별개이므로 답변 뒤에도 이견이 있으면 금융회사 민원창구와 금융감독원 절차를 이용합니다.
대상회사	- 신청·거절 화면에 SCB 사용 여부, 주요 기준, 기초정보의 출처와 설명·정정·재산출 버튼을 함께 표시합니다. - 자동결정과 사람의 심사 구간, 오류 정정이 공동모형에 반영되는 기한과 결과통지 방식을 공개합니다.
당국	16개 은행의 접수창구·처리기한·회신 항목을 같은 형식의 이용자 안내로 공개합니다. - 기존 모형과 비교한 승인률·금리·연체율·정정요청 결과를 동일 차주군 기준으로 공시합니다.

칼럼길

새 데이터가 금융 접근성을 넓히는가 오류를 넓히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시범운영 은행의 실제 승인·금리 효과와 설명·정정 요청 처리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A 얇은 금융이력을 보완 사업 흐름 데이터가 정상 영업을 구별하고 정정창구가 작동하면 담보·개인점수에 막힌 사업자의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B 공통 오류가 반복 잘못된 업종·매출·상권 정보가 여러 은행에 복제되고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거절의 범위만 넓어질 수 있습니다.
--	---

어디를 보면 아는가 · 첫 적용 은행들의 신청화면과 시범운영 결과에서 SCB 사용 고지, 설명·정정 처리기한, 승인률·금리·연체율 비교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4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리서치 점수가 떨어진 이유를 알 수 없다 ↗](#)

[제도와 규칙 설명의무 ↗](#)

[피해구제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상품 신용대출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5건

01	1차 · 8월 말부터 16개 은행, 2.2조원 규모 개인사업자대출에 순차 시범운영 금융위원회 2026년 7월 27일 공식 발표 원문 열기 ↗
02	1차 ·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AI로 분석 금융위원회 SCB 추진방안 원문 열기 ↗
03	1차 · SCB 등급을 신용정보로 포함하는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3일 규정개정 원문 열기 ↗
04	1차 · 자동화평가 사용 여부·결과·주요 기준·기초정보 개요 설명 및 정정·삭제·재산출 요구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2026년 8월 13일 시행본 원문 열기 ↗
05	1차 · 금융거래 계약의 제안·승낙 결정과 웹·앱 등 요청·회신 방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1조의2 원문 열기 ↗

추적 예정	첫 7개 은행의 적용 화면과 하반기 9개 은행 확대, 10월 개인사업자 사잇돌 적용 때 설명·정정 창구와 시행효과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PDF의 '8월 중 제도 개정 예정'을 기준일 현재로 갱신했습니다. 8월 13일 감독규정 개정은 확정 사실로 반영하고, 별도 이용가이드의 공개 여부와 은행별 접수창구는 후속 확인 대상으로 남겼습니다. 사이트 공개 순서를 다시 대조해 연번을 제51호로 바로잡았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대출 승인이나 조건 변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신청에는 각 은행의 최신 심사기준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